제703호

2002년 국정지표
일류경제경쟁력 실현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국정뉴스

11월 18일(월)
2002년
주간 / 비매품

발행인 신중식 편집인 고석만 발행처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우)135-5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 전화 (02)3450-2255(편집) 3450-2275(구독) FAX 3450-2259

활짝 열린 전자정부(www.egov.go.kr) 시대

유리알 행정…연5조7000억 절감

정부가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관련기사 4·5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완성 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자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전자정부 기반 완성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완성 보고회'를 주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자정부 기반 완성은 국민과 기업의 사회적 비용절감, 행정투명성 제고와 부패방지, 정부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실현해 나가도록 관계부처가 더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인사·조달 정보화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앞당겨 지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전자정부 기반의 완성을 계기로 선진국들도 우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한국은 명실상부한 정보화 선진국의 길로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 관공서나 종이서류 중심의 종래 관행을 온라인체제로 전환, 행정서비스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해 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5월에는 11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총 2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이번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전자정부(www.egov.go.kr)는 사실상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통돼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청,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4000여종의 정부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등 안방민원 시대를 맞이했다.

정부도 재정·인사·조달 등 핵심 행정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터넷 신청서류 우편으로 받아
핸드폰·PDA로도 민원서비스

11대 중점과제 2903억 들여 결실

부조리 방지 효과 커질것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기반이 완공됨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혁신으로 인해 연간 1조8000억원이 절감되고 재정정보화로 5800억원을 비롯해 종합전자조달과 종합국세서비스를 통해 연간 3조2000억원, 1400억원의 비용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다 부조리 방지 등 비계량적인 효과까지 합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완료한 전자정부의 11대 과제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체제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공통 행정업무 정보화 △전자인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확산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확산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이다.

이러한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국민생활 전반에서 전자서비스와 전자행정을 확산시키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정부 서비스항목을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를 기하며, 핸드폰·PDA 등으로도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정부(M-Goverment)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보급 확산, 정보격차 해소,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선진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이번 전자정부 기반완성으로 세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상위 9% 국가 해당

지난 6월 발간된 UN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상위 9%의 국가만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UN이 정한 세계평균 전자정부지수가 1.6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0으로 190개 회원국 중 15위에 랭크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미국 브라운대학이 세계 189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분석·평가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54점을 기록해 세계 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홍영모기자〉

2001년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6면

연말정산 공제 어디까지 받나 8면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말물가 들썩" 〈11월10일자, 연합뉴스〉

채소값 내리고 석유류도 인하 전망

연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수입곡물을 비롯 농산물·생필품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으며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도 인상 대기 상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당근·시금치·호박·풋고추 등 농산물 가격이 최근 18~40% 올랐다.

당근은 이달초 개당 460원으로 지난 주에 비해 18%, 호박은 750원으로 32%, 시금치 한 단은 1080원으로 42%, 풋고추(1㎏)도 6000원으로 20% 각각 뛰었다. 생필품 중 설탕은 지난 1일부터 15㎏들이 정백당이 440원(3.7%) 오른 1만244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식용유도 1.8ℓ 짜리가 3050원으로 10.9% 올랐다.

㈜SK와 LG정유·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ℓ당 8~20원, 경유를 ℓ당 25~30원, 프로판가스는 ㎏당 75원씩 인상했다. 2년마다 100원씩 올리기로 한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연말 인상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수입곡물을 비롯 농산물·생필품 등이 줄줄이 오르는 등 연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예년보다 빨라진 추위로 인해 일부 농산물의 생육부진으로 시금치나 당근·풋고추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온이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락동 도매가격은 지난 주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류 가격의 경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12월 중에는 국내 석유류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설탕가격은 관련 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인상된 바 없고 오히려 금년 들어 2차례나 인하된 바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초부터 이동전화 등 다수의 요금인하로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1.3%(△0.2%p) 하락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이동전화 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올 들어 이동전화요금(SK텔레콤 기준)의 경우 △8.3%,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 12.9%, 건강보험약가(323품목) 3.5%, 건강보험수가 2.9%, 주택용전기요금 6.1% 등이 각각 인하된 바 있다.

최근 주택시장도 정부의 안정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이어지면서 10월 이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비자물가도 10월까지 2.6% 상승해 유가급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정부 목표인 연평균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광명·시흥과 김포에 자족형 신도시" 〈11월14일자, 대한매일〉

후보지·개발시기 검토된 바 없어

이르면 오는 2006년쯤 경기도 광명·시흥과 김포 일대에 각각 주택 25만호와 16만호 규모의 자족형 거점 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제2신도시 추진안을 최근 잠정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건교부 추진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대의 2000만여평 부지에 행정·업무·주거·휴양 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해안 중심축의 거점도시를 건설한다.

건설교통부가 광명·시흥과 김포 일대에 각각 25만호와 16만호를 수용하는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키로 잠정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월4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를 조사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지를 비롯한 개발시기와 방식; 개발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그 어떤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현대 자료거부… 검찰수사 불가피" 〈11월14일자, 연합·15일자, 세계일보〉

산업은행 관련자 진술 듣는 상태

감사원의 '4900억원 대북 지원설' 연장감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현대상선이 관련자료 일체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감사원의 현대상선 고발과 대북 지원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현대상선의 자료제출 거부 등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상선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할 경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북 지원설이 또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4일 현대상선이 감사원과 산업은행의 사용처 내역과 관련한 금융 및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감사를 중단키로 했다. 감사원은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규명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4900억원 대북지원설' 연장감사와 관련 현대상선이 관련자료 일체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감사원의 고발과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감사원은 현재 산업은행에 대한 일반감사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취급한 현대상선 당좌대월금의 차입신청·심사·승인·대출기한 연장 및 대출종류 변경 등에 대한 자료검토를 끝내고 산업은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실질감사결과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 소명자료를 현대상선에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와 관련해 현대상선에 대한 고발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감사원 2국1과)

"한·칠레 FTA대책예산 반영안돼" 〈11월13일자, 한국경제〉

예산안 제출 보다 가서명 늦은 때문

정부가 내년 농림부 예산에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부처인 농림부가 FTA 국회비준에 앞장서는 인상을 주기 싫어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관련 질의에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가 후속대책을 2003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이병석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피해대책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칠레 FTA협정 가서명이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시기보다 늦은 지난 10월24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농림부는 현재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국회 비준여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대책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FTA 비준과 관련해 농림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한·칠레 FTA 찬성 입장을 시사하거나, 예산심의 과정에 예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다.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한은 내년부터 화폐개혁 추진" 〈11월11일자, 각 신문〉

정부, 화폐단위 변경 바라지 않아

내년부터 화폐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르면 2005년부터 새 화폐가 통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100 대 1의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현재의 1만원은 새 화폐 100원으로 바뀐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계 일각에선 화폐 단위 변경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0만원 고액권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0일 자기앞수표 하루 발행 장수가 516만장, 발행 비용이 연간 6000억원에 이르러 올해 안에 '디노미네이션 시안'을 마련, 내년에 공청회와 정부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화폐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화폐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에 대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받은 바 없다. 정부는 화폐단위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참고로 새로운 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부 승인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

"디플레이션 땐 선환율 인상" 〈11월15일자, 한국일보〉

별도의 비상방안 강구·수립 안해

정부는 내수경기 급랭과 세계 경제의 불황 조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방안을 담은 '디플레이션 대응 기본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유동성 과다와 임금 및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단기 인플레이션 요인과는 별개로 국내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 ↗

특별기고 **계승 발전돼야 할 APEC 성과**

'경제~안보 현안해결' 외교 광장

김 기 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지난 93년 가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두고 필자는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이 정상회의는 그 어느 국제회의보다 중요하므로 정부가 회의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이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활동상을 높이 평가하는 기고를 다시 하기도 했다.

몇해째 계속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관계로 필자는 첫 APEC 정상회의로부터 만 9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열린 올해 APEC 장관 및 정상회의(10월23~26일)를 멕시코 라스 카보스 현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느낀 것도 93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PEC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국제적 회합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첨단장비 이용 신속통관 제안

APEC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2 이상이 APEC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웅변된다. 더욱이 APEC정상회의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이른바 세계 4강의 정상을 포함한 총 21개국의 정상이 동시에 참석하는 장이다.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상들인 이들은 본래의 영역인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APEC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안보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기간 동안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무슨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은 즉시 핵개발 내용을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공개하고,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핵개발사업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김 대통령은 현재 세계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테러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 절

북한 핵 폐기 한·미·일 정상 합의
불황 타개 금융공조 제의에 호응
회원국에 수출 3분의2 이상 몰려

실함을 지적하고, 우선 테러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는 무역흐름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는 신속한 검색과 통관절차(Smart Process)를 만들자고 제안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금융분야의 정책 공조를 도모하자는 김 대통령의 제안 역시 정상들의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APEC 회원국간의 기술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시한이 곧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그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교육, 무역투자관련 상호정보제공 사업, APEC교육재단 등과 같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기간 동안 중국·멕시코·인도네시아·칠레 등과의 양자정상회담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의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원유공급의 확보를 위한 개별 정상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2005년엔 우리나라서 치러

김 대통령은 이처럼 APEC 내에서 시의적절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은 물론 상대방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뛰어난 제안과 발언을 취임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해옴으로써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의 역량은 특히 APEC과 같은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종종 잘 구별된다.

한국태평양협력위원회 책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니와 평범한 한시민의 입장에서도 오는 12월 대선을 통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간에 이와 같은 김 대통령의 업적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계·발전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의 번영과 평화도 더욱 잘 담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반인 2005년에 APEC회의를 주최하게 돼있다. 이 회의를 멋들어지게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APEC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APEC 성과의 계승·발전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유 외환을 이용해 달러 매입에 나섬으로써 환율인상→수입물가 상승→물가상승→자산가격 회복의 순환을 겨냥한 환율정책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가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 환율인상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을 우려해 별도의 비상방안을 강구하거나 수립한 바 없다.

또한 자유변동환율제 아래에서 현재의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지나친 환불안 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는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은행 보험상품 독점권 제한" 〈11월13일자, 경향신문〉

구체적 방안·일정 확정된 바 없어

정부가 내년 8월부터 허용될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사가 업무제휴를 맺어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해 한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독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특정 보험사에 상품 독점권 부여를 추진중인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이 특정보험사 상품의 독점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까지 은행의 보험상품 독점권 제한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 등을 결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화섬산업 4개사 퇴출방침" 〈11월11일자, 동아일보〉

화섬업체 구조조정 결정 채권단 몫

현재 구조조정중인 화섬산업이 13개사에서 9개사로 줄어든다. 또 살아남은 업체는 규모나 기술, 연구개발 능력에 따라 △차별화 제품 △범용 제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 3개 그룹으로 재편돼 생산을 특화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제16회 섬유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 같은 업계 재편 전략을 밝히고 2010년까지 지난해 159억달러였던 섬유 수출을 300억달러로, 110억달러였던 무역수지 흑자는 200억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한편 각종 섬유 소재 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화섬산업 4개사를 퇴출시키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화섬산업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퇴출 등 구조조정 추진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이기에 산업자원부는 화섬산업 퇴출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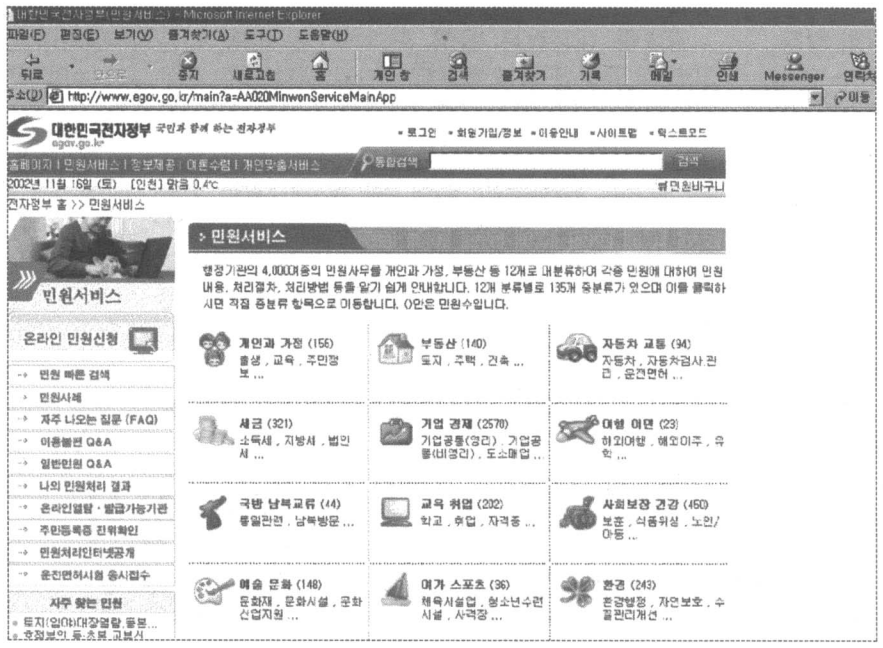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출범의미 · 효과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받는다

국가행정의 혁명이라 할만한 전자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전자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정부를 지향하는 전자정부가 어떻게 구현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류국가 도약발판 마련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9년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총 2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번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인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는 또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 처리절차의 획기적인 개선과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전자정부의 닻을 올림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그 발전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진행된 전자정부 구축은 △최고 수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기업활동에 최적의 환경제공 △생산성 · 투명성 · 민주성이 극대화된 정부 등 3가지의 청사진을 완성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안방민원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안내는 물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에서 전자적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관공서간 정보공동활용으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됐다.

세계 수준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
정부 생산성·기업 경쟁력 극대화

민원처리 실시간대 공개

또 기업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온라인화 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수출 · 입화물, 선박의 입 · 출항, 통관, 운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화 됐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신청 · 처리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간소화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은 곧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민원처리과정과 절차가 일반인에게 실시간 공개되고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가깝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를 구현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연간 1조8000억원이 절감되고 종합전자조달 3조2000억원, 종합국세서비스 1400억원, 재정정보화 58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의 비용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 부조리 여지가 없어지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계량적인 효과까지 합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기반구축 이전에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이제 본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작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모기자〉

100% 활용 문답풀이

'인터넷 인감' 공인인증서 있어야
개인정보 통신망 통해 확인 안전

△인터넷 신분증 '공인인증서'(전자서명)=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민원 신청자가 민원 신청 서류에 적힌 본인임을 인증해 주는 '인터넷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래에서 인감이란 제도를 이용하듯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민원을 발급하는데도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의 중요한 기능은 인터넷으로 보내지는 문서의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해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증권거래를 이용하는 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하는 필수품인 것이다.

△어떻게 만드나=공인인증서발급은 매우 간단하다. 당장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등록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처음 등록할 때는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인지를 확인받고 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지 사설인증서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한다.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만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모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다.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한다는 것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유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과거와 같이 관리기관의 내부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민원신청인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민원처리 기관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민원인의 성명 · 주민번호 · 주소만을 확인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위해 기본 정보 이외의 세대주 · 주소이전 이력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관공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종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은 정부기관만이 연결된 폐쇄망으로 외부의 침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운영하던 시스템의 보안장비도 대폭 확충하였으므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돼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납품-조달 담당자 만날일이 없다

4000여민원 절차 인터넷 게시 공무원 업무 줄어 서비스 확대

우선 전체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 · 부동산 · 자동차 · 세금 및 기업분야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구축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 국세청 및 대법원 등이 정보연계 및 제도적 협력체제를 마련했다.

학교생활상 온라인 제공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 · 호적등초본 · 토지대장등초본 · 지적도 · 사업자등록증 등 실생활에 필요한 393종의 증명서류를 신청해 우편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받아볼 수 있다. 또 4000여종의 민원은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을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 세금 · 교육 · 부동산 거래 · 병역 · 조달에 관한 서류 등은 물론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이나 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거래(G2B)와 관련해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 종전의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하던 풍속이 비대면으로 변했다.

조달업체는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두툼한 책자로 발간되던 조달관보가 사라졌다. 특히 복잡하기만 했던 모든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납품업체 담당자와 조달담당 공무원이 만날 이유도 없어졌다. 납품 후에는 국고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던 대금도 등록계좌로 자동이체 돼 지급시일도 단축됐다.

수출 · 입 물류흐름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련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세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검역기관 등 수출 · 입 관계기관간 신고와 승인 등을 위한 거래방식도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 입화물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다.

기업의 재산보호를 위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등의 특허행정업무도 온라인화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에 힘을 쏟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교원 업무부담 대폭 감소

정부도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자정부를 통해 민원과 관련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민원처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민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원들의 업무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학생정보가 자동으로 상급학교로 송부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읍 · 면 · 동사무소의 자료와 연계, 취학아동의 명단과 전 · 출입사항을 일괄처리하게 된다.

내년도 3월부터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생지도 등 교무 · 학사업무도 온라인으로 지원돼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내에서는 방대한 인사 · 급여 시스템간 정보가 연계된 인사시스템이 보급, 종이대신 전자서류로 대체되고 출장 · 교육 등을 위한 서류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돼 종이 없는 인사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 결산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연결, 처리하고 재정의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분석해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 문서의 발생 · 유통의 모든 과정이 유리알처럼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신청인은 물론 사회일반의 공공감시와 정보공유를 통해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투명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구비서류 감축대상

공동이용정보	비고(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서류)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전산호적정보	호적초본*, 호적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는 11월이후 시 · 군 · 구 별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소득·법인세 신고 인터넷처리 모든 행정업무 네트워크 연계

향후 추진방향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서비스(G4C)를 더욱 발전시키고, 차세대 '모바일 정부(m-Government)' 구현과 시 · 도 행정정보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모두 750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원처리 절차를 재설계(BPR)해 출생신고 · 전입신고 등 복합민원의 온라인 처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분야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또 종합국세서비스의 경우 소득 · 법인세 신고도 인터넷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핸드폰 · PDA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행정 업무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러 무선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만들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서비스 선도 시범사업도 발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전자정부 시대를 열 계획이다. 16개 시 · 도 공통 행정업무를 재설계해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 · 도 행정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시 · 도-시 · 군 · 구에 이르는 모든 행정업무가 네트워크로 연계돼 전자정부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또 환경 · 교통 · 인구 · 재해 등 영향평가 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 건설교통부 · 국립지리원 · 환경부 ·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정보와 평가과정을 서로 연계한 '통합 영향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 현재 470만명 수준인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를 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1년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경제성장률 OECD국 중 4번째
전자제품 생산 세계 3위 차지
인터넷 이용자 100명에 51명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건조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전자제품, 자동차 생산과 인터넷 이용자 등에서도 세계 5위권의 수준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로, 10위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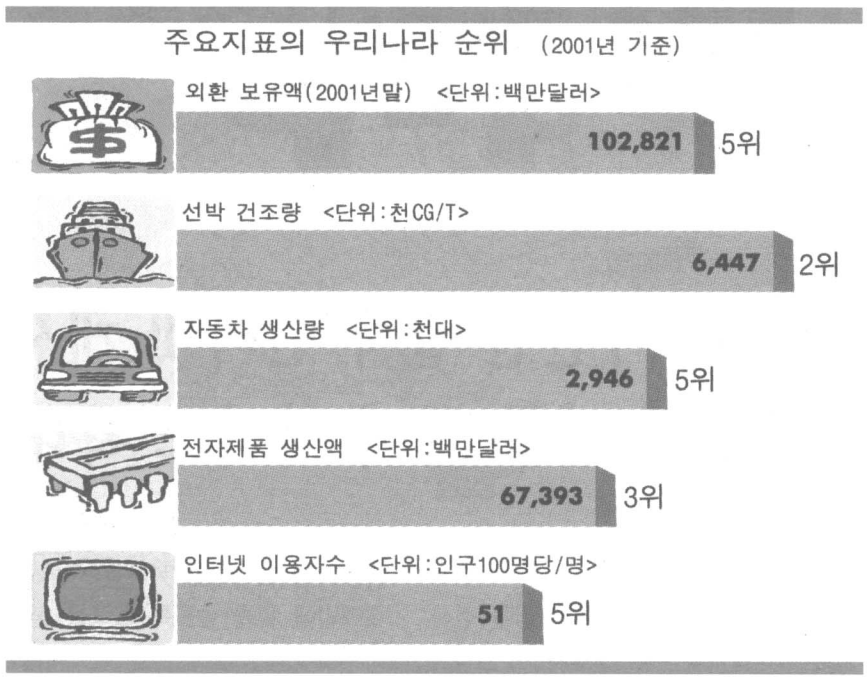
통계청은 지난 11일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통계자료를 수집해 우리나라와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수치는 한국이 불과 5년전 만해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회복과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5위에 진입,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선진 정보통신국에 한 발짝 다가섰음을 보여줘 국민의 정부 'IT 집중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01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수출규모·경제성장률·외환보유액·인터넷이용자수 등 17개 지표에 대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했다.

다음은 지표별 주요내용.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실업률 지속 감소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경제성장률 OECD 4위=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3.0%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4.1%), 헝가리(3.8%), 룩셈부르크(3.3%)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2000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대만·싱가포르·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4222억달러로 세계 12위였으며,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10조2081억달러)으로 우리나라의 24배 수준이고 이어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순이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4만2986달러)로 우리나라의 4.8배에 달했다.

또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28억2100만달러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 961억9800만달러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IMF 환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은 일본(3962억3700만달러)으로 우리나라의 약 4배 수준이며, 중국·대만·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물가상승률 다소 높아

◆실업률은 지속 감소=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은 3.7%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2.0%), 멕시코(2.5%), 영국(3.2%), 노르웨이(3.5%) 등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실업률이 지난 1998년 6.8%, 1999년 6.3%, 2000년 4.1%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OECD국가 중 19위로 다소 높은 편에 속했다. 일본(-0.7%), 프랑스(1.6%), 영국(1.8%), 미국(2.8%) 등 선진국은 최근 수년간 1~3% 정도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 터키(54.4%), 루마니아(34.5%) 등은 수년간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위와 14위로 2000년에 비해 한계단씩 내려갔다.

◆선박, 자동차 생산 '정상급'=지난해 한해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644만7000CG톤(표준환물선 환산톤수)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647만7000CG톤을 생산한 일본.

그러나 전년대비 일본이 1.1%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6.6%나 증가 양국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 32.4%, 한국 32.3%로 비등했다.

전자제품의 경우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674억달러를 생산해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또 세계 자동차의 5.2%를 생산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미국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20.2%를 점유했고 일본·독일·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조강 생산량은 4385만2000톤으로 세계 5위인 독일에 근소하게 접근하며 6위를 기록했다. 조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7.6%를 점유하고 있다.

쌀생산량은 740만7000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2%에 해당, 세계 12위 수준에 이르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세계 6위였다.

◆IT·정보화도 세계수준=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생산액은 674억달러로 미국(3150억달러)·일본(2309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을 나타냈다. 독일(483억달러)·영국(472억달러)·대만(426억달러) 등이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다.

에너지 소비는 많은 편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51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세계 6위에서 1단계 올라서 미국과 캐나다를 추월했다.

인터넷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이슬란드(68명)였고 싱가포르가 2위였다.

인구 100명당 개인컴퓨터 보유대수는 32대로, 세계 17위 수준이다. 1997년 15대에서 1998년 17대, 1999년 22대, 2000년 28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60/8명으로 26위를 차지했다. 2000년(21위)을 고비로 증가세가 둔화돼 벨기에·체코·그리스·슬로베니아·뉴질랜드 등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에너지 소비는 과다=지난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1억9590만톤으로 세계 총소비량의 2.2%를 점유, 세계 10위 수준이었다. 1인당 소비량은 4138㎏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의 2.8배로 다소 높은 편에 속했다.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세계 총소비량의 25%를 소비했으며,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세계 평균 소비량의 11배에 달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34만3000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0.77%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26번째로 많았다. 중국(12억8500만명)과 인도(10억2500만명)가 세계 총인구의 37.6%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2억, 브라질·러시아·일본·멕시코 등이 1억을 상회했다.

〈선경철기자〉

국가정책정보 실시간 서비스 KTV인터넷방송 www.ktv.go.kr

한국서 배울 것 많은 남아공 경제 — 시티즌
북한 핵 대화외엔 다른 방도 없어 — IHT
한·중·일 지역무역 협력 아쉽다 — 환구시보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라
(11일자, 남아프리카공 Citizen)

이런 모습을 그려 보라. 남아공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4000만 이상되는 전국민의 결집된 노력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각자의 금,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국고에 기증하라고 요청한다.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나 이는 정확히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국이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했던 일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에 호응했다. 5700만 국민들 중 350만이 그들의 금과 보석을 국가에 기증했다. 모두 25억불에 상당하는 227톤의 금이 모아졌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경제 거인이다. 한국은 세계은행과 IMF에 진 빚을 모두 상환했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1070억불에 달하고 신용등급은 상향조정되었으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김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온 재벌기업들에게 부채를 청산하고 비핵심 사업체들을 매각하거나 상호 교환토록했다. 이러한 방식이 남아공 항공, Telkom(전화회사), Spoornet(철도 운송회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비록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때 강력했던 한국노조의 주력 세력들이 와해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스웨덴의 볼보와 같은 대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인가?

놀랍지 않은가 COSATU(남아공 전국노동조합). 더불어 그들의 현재 실업률이 3.1%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남아공 국민들은 타보 음베키 대통령과 ANC(남아공 여당) 정부가 남아공 경제의 시동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남아공의 인종차별수정정책은 권력실세들의 무능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것은 편협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닌가?

가진 보석을 기증할 준비를 하라!

◆올브라이트, 북한과의 대화 '필수적'
(12일자,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계획 시인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북미 관계를 크게 열어놓을 전조로 보였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2년여 전 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는 11일 북한의 핵계획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대응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으나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하기 전까지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단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찰을 받는 플루토늄 연료봉에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한·중·일 3국 협력 기대
(11일자, 중국 환구시보)

현재까지 한·중·일 3국은 경제무역거래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그 경제협력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중·일 3국간 경제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고 중·일, 한·일 양국간의 정치관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을 동아시아 FTA 창설 차원까지 발전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중·일 3국의 FTA 협상관련 진행상황을 볼 때 한·일 양국만 보더라도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다가 중국 제품의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 당국의 무역정책 장벽 등 한·중간의 어려움도 산적해 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한·중·일 3국이 각각 아세안과 '10+1'의 FTA를 창설하고 최종적으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이 두 개 블록의 합병이나 3개의 '10+1'이 합병해 동아시아 FTA의 발전모델이 형성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경제기술협력과 무역의 편리화를 우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고 국가적인 차원보다 더 긴밀한 경제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3국이 통관·물류·은행·보험 및 상품운송회사의 통일된 네트워크 구축과 전자상거래네트워크 구축면에서 협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화시대의 한·중·일 FTA 기반시설 구축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자료: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KTV 볼만한 프로그램

남북 문화교류 성과·현황 살펴

KTV 특별기획 우리는 하나
하나 됨을 위한 몸짓!-남북문화교류
18일(월) 01:20~02:00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매우 활발해졌다. 얼마전 전 세계의 매스컴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한 손에 스포츠 친선의 횃불을 밝히며 우리는 통일 조국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었다.

지금까지의 남북 문화교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통일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 인력확보 과제 논의

KTV정책포럼-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3일(토) 22:00~23:30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난 장기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소기업 인력확보와 올바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인지 논의해 본다.

이연택 박사의 진행으로 이보원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이상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장)·류재원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윤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참된 아름다움 기준 무엇인가

KTV파워토크-비너스에서 성형미인까지
18일~22일(월~금) 09:10~09:30

미술사학자 마순자 박사가 출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역사속의 아름다움 등을 살펴보고,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월〕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다:시대와 지역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러 미술작품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화〕 백색 비너스에서 흑색 비너스까지:그리스 문화에서부터 17세기 유럽의 다양한 문화작품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 서양 고전미술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본다.

▶〔수〕 우리 역사 속의 아름다움:자연미와 소박미에 근거한 한국인의 전통적 미의 기준을 알아보고 현대인의 서구 지향적 의식구조와 패턴을 반성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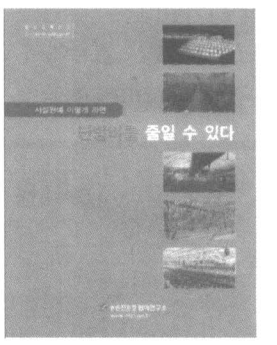
▶〔목〕 아름다움은 사회와 시대가치의 반영: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현대 미술에 나타난 다양한 미의 관점을 여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금〕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넘자:아름다움은 결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참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최 강기자〉

새로 나온 정부간행물

시설원예 난방비 줄이는 방법

시설원예 이렇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시설농업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영농지도서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설원예 면적은 92년 31,741ha에서 2001년말 52,135ha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유리온실 및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같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곳이 많다. 그러나 IMF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시설농업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인이 난방비 절감 기술을 익혀 농산물 생산 원가를 줄이는 것은 시설농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농법이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50쪽/031-240-3520/비매품〉

연말정산 공제 어디까지 받나

새차 구입 11월말까지만 적용 신용카드
처제·시동생도 함께살면 가능 의료비
초중고생 1인당한도 150만원 교육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소영씨(35·주부)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올 초부터 각종 영수증을 직접 꼼꼼히 챙긴다.

지난해 1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세금에서 환급 받아 재미가 쏠쏠했던 김씨는 올해는 좀 더 많은 액수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세테크'에 돌입한 것.

모든 생활비 신용카드로 내

김씨는 우선 각종 ADSL 및 핸드폰 사용료 등 통신비에서부터 아파트 관리비, 시내버스요금과 슈퍼에서 사는 몇천원짜리 물건값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챙겼던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 약국 영수증 등도 바로바로 모아둔다.

지난달 5년만에 새로 산 승용차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이달까지만 카드로 구입한 차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는 정보를 접한 김씨는 차 구입계획을 몇 달 앞당겼다.

이처럼 김씨는 내심 내년 1월에는 올해 보다 환급되는 세금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연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냈으면 되돌려 받게 되며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한다.

은행 이자율 줄어 큰 관심

직장인들 사이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 그까짓 것 얼마나 돌려받겠다고 영수증 챙기느라 분주하느냐"는 분위기도 만만찮았지만 매달 월급의 약 10% 이상이 세금으로 떼어지고 은행예금이자율이 5%내외에 불과한 요즘시대에서 연말정산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테크'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빠트리기 쉬운 내용을 점검해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현금서비스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어야만 하고, 그 초과금액의 20%한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 우선 가능한 한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들의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굳이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금액은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카드로 사용한 각종 공과금·의료비·보험료 등은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공제=본인·배우자·자녀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등과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도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남이나 처제·시동생·시누인인 경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라식수술비나 보약을 제외한 한약,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비용과 치열교정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양육비·교육비는 한쪽만

◇교육비 공제=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까지의 학비 전액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연령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학비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인 경우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1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50만원과 교육비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역시 각자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도 각자가 사용한 금액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나 부양가족 공제·노부모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선택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선주기자〉

◇올해 달라지는 내용

국민연금 불입액 소득공제가 50%에서 100%로 올랐다.

또한 소득세율은 현행보다 약 10% 내려갔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0% 세율을 9%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18%, 4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는 2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500만~15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당초 40%에서 45%로 인상됐다.

장애자나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장애인 재활교육기관에서의 특수교육비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수업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이나 학칙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해 원격대학생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연금 불입액 공제 50%→100%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곧바로 들통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도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교원·군인·경찰·소방 등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잘못되기 쉬운 공제 내용

국세청은 전산자료를 분석, 세금 불성실신고에 대해 철저한 관리 분석을 통해 매년 세금 불성실자를 포착 이들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특히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등을 이중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국세청 전산을 통해 곧바로 가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는 없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로 보험료나 공과금을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로 처리하거나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꾸며 공제받는 경우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연말 개통·내년 착공 고속도로

천안~논산 등 연내 4개구간 개통

물류비 한해 4590억 절감

올 연말까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등 5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물류비 절감은 물론 명절 고향 가는 길이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전주~ 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주문진~ 속초 구간 신설공사가 본격화되고 경부고속도로 경주~ 언양 구간 확장공사도 시작된다.

다음은 연말 개통 및 내년 착공 고속도로 주요내용.

운행거리 · 시간 크게 단축

◆연말 개통 고속도로 = 금년말까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의 여주~ 충주간, 평택~ 안성간 고속도로 등 3개 구간이 신설 개통되고, 서울외곽의 판교~ 퇴계원간, 경부의 천안IC~천안Jct 등 2개 구간이 확장 개통된다.

이중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완공되는 두번째 고속도로로서 총 1조 7910억원을 투입해 5년만에 완공되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논산까지의 운행거리가 30km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2시간30분에서 2시간10분으로 단축돼 연간 53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백제문화유적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충남지역의 경제발전과 상습 지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회덕구간과 호남고속도로 회덕~논산구간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중 구미~ 상주간(2001년9월 개통)에 이어 두 번째로 충주~ 여주 42㎞ 구간이 착공 6년 2개월만에 완공된다.

◇올 연말 개통 고속도로

구분	개통구간	연장(㎞)	차로수
신설	천안~ 논산	81	4
	중부내륙(여주~ 충주)	42	4
	평택~ 안성	27	6
확장	서울외곽(판교~ 퇴계원)	40	8~10
	경부(천안IC~Jct)	8	8

이 구간 개통으로 여주에서 충주까지의 운행거리가 15km 단축되고 시간도 25분 가량 단축돼 연간 69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기존 경부축 중심의 남북간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1997년 12월에 착공해 다음달말 완공되는 평택~ 안성간 27㎞ 구간은 운행거리 10km 단축과 시간 20분 감소로 연간 87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일부 확장 개통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판교~ 퇴계원) 가운데 강일~ 퇴계원간 9㎞가 이번 연말에 최대 10차선으로 확장된다. 한강을 횡단하는 강동대교를 포함하고 있는 이 구간의 확장으로 강동대교 전후구간의 상습 교통체증이 해소돼 연간 25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내년에 착공되는 고속도로 = 내년 상반기 중에 전주~ 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 속초 고속도로, 경부의 경주~ 언양 등 3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 광양 고속도로는 전주~ 임실~ 남원~ 구례를 거쳐 광양만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118㎞)로, 광양항 부두와 광양·여천 등 전남 동남부 산업지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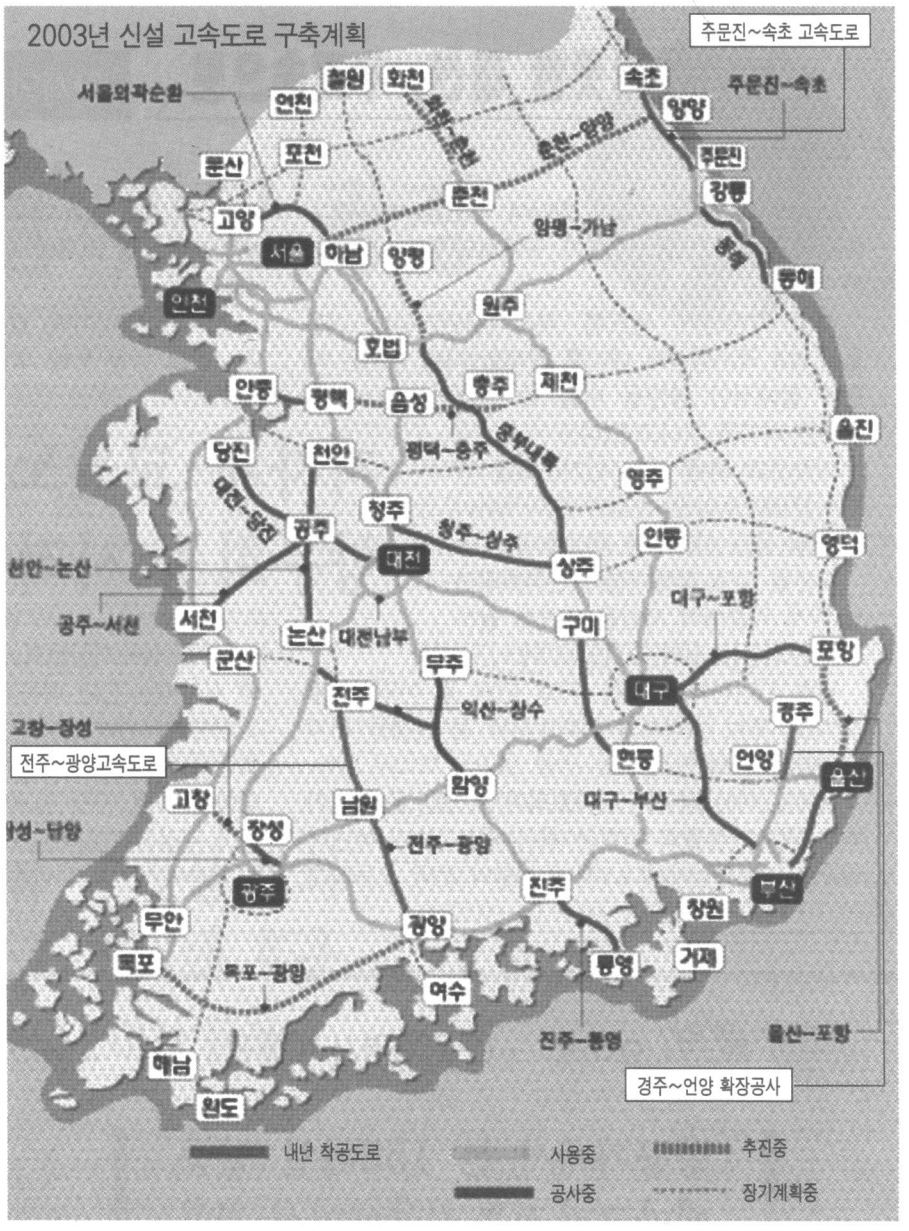
물동량 수도권이동 쉽게

200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에 착수,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에는 총사업비 3조 35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동해고속도로 주문진~ 속초 구간은 동해안을 따라 주문진을 출발, 속초까지 51㎞에 이르는 4차선 도로로 내년 9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08년 완공할 계획이며 총공사비는 1조355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해안 관광수요를 해결하고 향후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주~ 언양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도 내년 상반기 착수해 2008년 완공할 계획이다.

〈선경철기자〉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경주~언양 내년 착공

깨끗한 대선, 우리손으로 — 단체의 선거활동

지자체·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향우회등 사적인 모임 이용못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입후보자간 정책구도가 구체화되면서 선거열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에 이은 올해 4대 국가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이번 대선은 국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깨끗하고 밝은 선진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를 둘러싼 논점과 알아두어야 할 상식 등을 시리즈로 정리했다.

대선을 앞둔 정책대결이 본격화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자신을 대변해 달하는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사회 단체 등 이익단체들의 대선 후보 초청회와 집회·시위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올 하반기들어 이런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 신고건수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10일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교육자대회, 유아미술학원연합회대회, 빈민자대회를 비롯해 약사회단체 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거가 막바지에 흐르면서 후보 초청행사와 시위·집회 등을 통해 후보자들이 표심을 의식한 공약을 이끌어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 등 각계 이익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직접·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자칫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 안병도과장은 "특히 선거 때마다 연고를 바탕으로 결성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동호회나 특정후보를 위해 급조된 단체 등이 선거에 직접 관여해 선거를 과열 혼탁양상으로 몰아가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은 공공단체나 사적모임 등의 단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원노조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사적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교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후보자 초청대담이나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관이나 공선협 등 선거관련단체들의 경우 후보자등록이 끝난 11월2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18일까지 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선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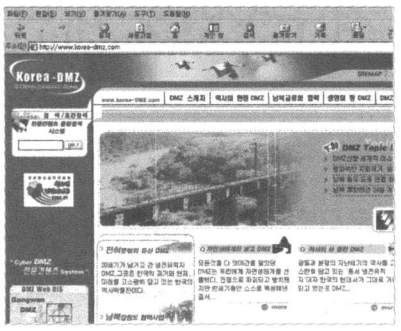
클릭! go.kr 한국의 역사 박물관

항공기에서 본 155마일 일품
백마고지 전투시뮬레이션 체험

반세기동안 냉전의 흉터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해온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 자연사 박물관' DMZ를 강원도청이 인터넷에 옮겨 놓았다.

특히 'KOREA DMZ(www.korea-dmz.com)'는 통일안보코스·철의 삼각지코스·비목의 현장코스·모험관광코스·펀치볼 코스 등 휴전선을 따라 분단의 민족사와 통일 염원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관광코스를 별도로 꾸며놓아 볼거리가 풍부하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의 이모저모를 인터넷에 옮겨 놓았다는 점이 이 사이트를 찾게 하는 최대의 매력이다.



야생동식물 눈으로 확인

우선 'DMZ 스케치' 코너를 찾아보면 지세지형·사회 문화적 특성 등 일반적 개괄을 포함해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DMZ 변화 모습, DMZ 인근의 각종 개발현장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천년고도 궁예도성·북한 노동당사·한탄강 승일교·철원 제일감리교회·얼음창고·제사공장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온 각종 유물과 야생 동식물 등 전혀 뜻밖의 유산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역사의 현장 DMZ' 페이지는 한국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곳. 우선 방문자들은 155마일 DMZ를 항공에서 바라볼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

또 백마고지의 생동감 있는 전투현장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949고지 전투·가칠봉 전투·단장의 능선 전투·대우산 전투·도솔산 전투 등 DMZ 인근에서 벌여졌던 각종 전투현장도 동영상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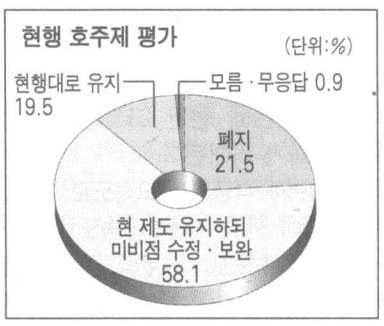
아울러 '생명의 땅 DMZ'에서는 최근 '접경생물권보전지구' '생물 종 다양성 보전지구' 등으로 불리며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 DMZ'가 화려한 모습으로 네티즌들을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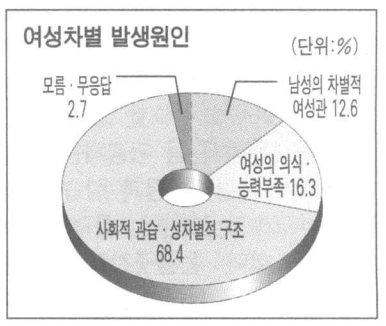
이밖에도 'KOREA DMZ'를 방문하면 남북교류와 협력·남북관계 일지 등 다양한 DMZ 관련 정보를 섭렵할 수 있다.

〈채수일기자〉

남녀평등 여론조사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찬성" 87.2%
92.4%는 "부부 공동명의가 좋아요"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 남녀 모두의 채용비율을 최소 30% 이상 합격토록 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87.2%(남 84.2%, 여 90.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TNS Korea에 의뢰,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남성 491명, 여성 509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특히 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교수 채용 목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88.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부간 공동명의제'에 대해서는 무려 92.4%가 찬성했다.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폐지해야 한다'가 21.5%,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19.5%로 각각 나타났다.

평등수준 교육분야 으뜸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성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48.7%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8.5%가 '불리하다'고 응답한 반면 12.5%는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는 68.4%가 '사회적 관습과 성 차별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여성의 의식과 능력부족'(남 14.9%, 여 17.6%) '남성의 차별적 여성관'(남 11.8%, 여 13.4%)의 순으로 지적했다.

분야별 남녀평등 수준에 있어서는 '교육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영모기자〉

정부청사게시판

알 림

일본 견학희망대학생 선발

외교통상부는 2003년도 일본 견학 대학생을 선발한다.

2003년 1월14 - 23일 (9박 10일)동안 일본대학생과의 간담회, 문화유적 견학, 홈스테이 등을 통해 양국 대학생간 이해 및 우호 증진을 돕기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6개월 이상 일본 체류 경험없고 일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이다.

참가 희망자는 12월10일까지 참가신청서 · 자기소개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증명사진 2매를 첨부해 직접 또는 우송(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대우빌딩 1206호 외교통상부 홍보과)하면 된다. 문의 02-725-7606/7

겨레과학기술 도구 체험전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30일까지 겨레과학기술 도구 체험전을 개최한다.

우리 고유의 겨레과학기술을 발굴, 연구, 수집한 결과(겨레과학기술조사연구 10권 발간)를 바탕으로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행사는 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속상감(금속에 금은실로 문양넣기), 활 · 화살 제작과정 및 도구류, 갓 제작과정 및 도구류, 옹기 제작과정 및 도구류 등의 '겨레과학기술 도구류' 전시와 수레바퀴만들기, 야철다루기, 벼루가공 등의 '겨레과학실연마당', 투호, 칠교, 굴렁쇠 굴리기, 짜임과 퍼즐 등의 '체험마당'을 열어 관람객이 직접 실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42-861-0496

아버지 동화 구연대회

문화관광부는 11월23일 대우주택문화원(서울역 건너편 연세 빌딩 1층)에서 제8회 전국 아버지 동화 구연 대회를 후원,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래동화, 창작동화, 우화 등 어린이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30명의 아버지가 참여하며, 각각 구연 시간은 5분 이내로 주어진다.

최우수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 상장이 주어지며 입상자는 동화 구연 아버지회 회원으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의 02-714-9045 · 02-966-8333

벤처농업 관리전략 강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11월26일 오후 1시 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벤처농업의 정책자금 조달 및 농업에서 지적재산 관리전략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다.

참가대상자는 벤처농기업창업자 및 예정자, 농축산물가공 및 유통사업 참여업체, 농산물전자상거래업체, 신지식농업인, 농업관련 산업종사자, 관광농원운영자, 벤처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당일 등록 및 신청도 가능하나 자료준비 관계로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지난 강좌때 신청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가비는 무료. 강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3299-4279

모 집

해병대 캠프 참가 희망자

해병대사령부는 2003년도 겨울 해병대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병대캠프는 12월 7일까지 1200명을 선발해 2003년 1월6일 1차(50기)캠프를 시작으로 1월20일 3차(52기)까지 경기도 김포와 경북 포항에서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해병대 공식 홈페이지(www.rokmc.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기본반, 가족반, 고급반으로 구분해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기본반은 중학생 이상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부대 견학 및 내무생활 · KAAV 탑승훈련 · IBS 기초훈련 등을 실시하며, 고급반은 고교생 이상으로서 입소식 전 체력검정에 합격한 자로 제한 선발한다.

가족반에는 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로 2인 이상 6명 이하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고, 기본훈련 외에 세대별 · 가족별 편지쓰기, 대화의 시간, 가족별 장기자랑 등 가족간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체 지원자는 포항캠프의 경우 최대 25명까지, 김포캠프는 최대 15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공 모

대한민국 영상대상 작품

문화관광부는 제12회 대한민국 영상대상 시상식(12월16일)에 앞서 작품을 공모한다.

대상은 독립프로덕션, 비디오(DVD, VCD) 제작 · 배급업체이며 분야는 드라마 · 교양 · 기획 다큐 · 레저스포츠 · 교육 · 뮤직비디오 · 애니메이션 · 극영화 등 자유 출품작으로 당해연도 제작된 미발표 작품이며 단 인기작품상 및 기술상은 당해연도 출시된 비디오 작품중 선정한다. 응모자는 신청서, 작품개요(원고지 5매내외), 신청자 이력서 및 작품제작실적,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필증을 첨부해 11월30일까지 한국영상협회(서울 강남구 역삼동 773-5 삼일빌딩4층)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3704-9630 - 3

〈최 강기자〉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 광장에서

송 순 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에 편견 없는 관심을
아·태경기대회 투혼에 감동

장애인복지심의관으로 부임한지 4개월, 25여년동안 복지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업무는 처음인지라 내심 걱정을 하였지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그러한 마음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짜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등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를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에 근무하는 20명의 직원으로 제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랐지만 직원모두가 자신이 맡은 산적한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준 결과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를 일궈내고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 10월26일부터 1주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8회 아 · 태장애인경기대회는 양궁, 육상, 휠체어테니스, 휠체어농구 등 17개 종목에서 세계 40개 회원국 2253명의 선수 및 보호자가 참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아 · 태장애인경기대회에 비해 최대규모와 최고수준으로 치러졌다.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업무와는 별도로 부임하던 날부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자칫 일반인에게 소외되기 쉬운 대회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신명나는 잔치로 만들기 위하여 쏟아부은 노력과 치밀한 대회준비로 온 국민의 열광적인 성원에 힘입어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을 때의 감격은 그 동안의 땀을 깨끗이 씻고도 남을 만큼 고귀한 선물이었다.

운동하며 좌절의 늪서 헤어나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들은 빈약한 장애인체육의 저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마라톤에 출전한 시각장애 1급 임성준(24)씨는 고교 1학년때 부터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잃기 시작하여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으나 동생의 도움을 받아 석촌호수 주변을 뛰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마라톤을 통해 시각장애의 벽을 넘었다고 한다. 그는 마라톤이 어두웠던 인생을 밝게 바꾸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떨쳐질 때까지 달리겠다고 하였으며,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의 꿈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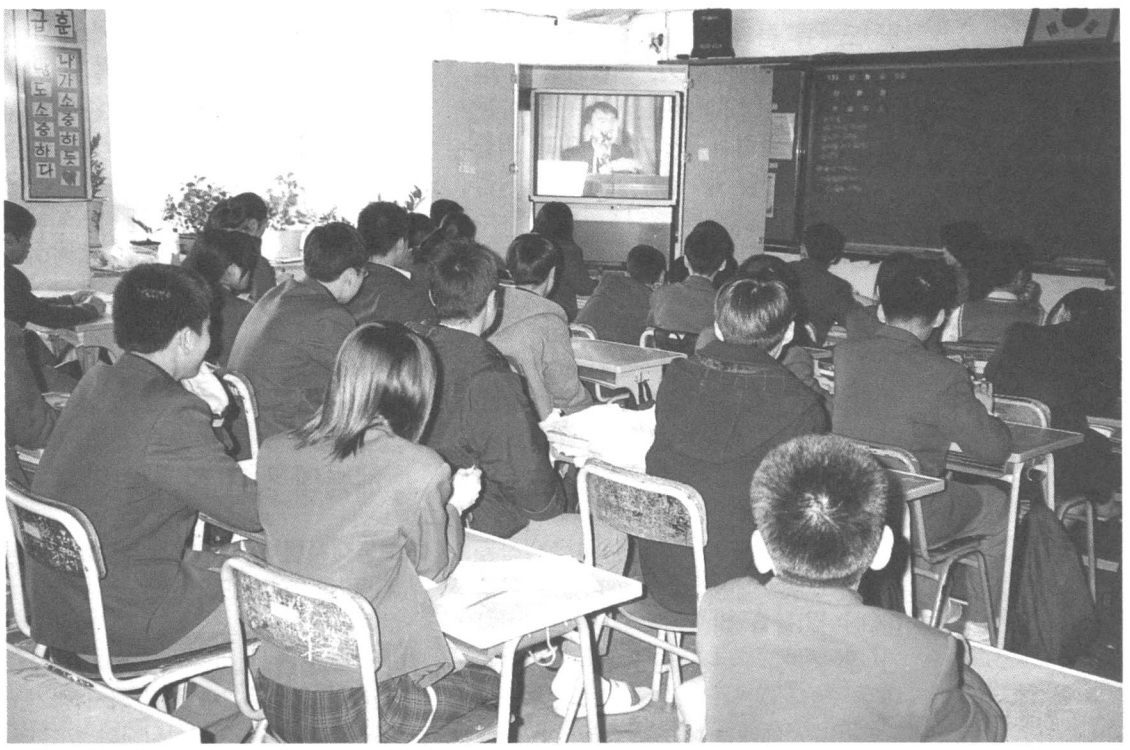
또한 수영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딴 정신지체인인 양성아(18 · 부천 부명정보산업고 2)양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의 결과 인간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성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인에 가깝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키우려고 노력한 어머니의 의지와 땀이 빚어낸 은메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편무조(48)씨는 공기소총 입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조씨는 87년 군에서 근무 중 차량전복 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체장애인 부부 조수남(35 · 2급), 신정희(35 · 3급) 역사는 각각 48kg, 44kg급에 참가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평생을 휠체어와 의족에 의지하여 살아온 이들은 비록 메달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장애를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하였다. 더 이상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아 · 태장애인경기대회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였으며, 이 대회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하는 등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결집하여 이룩한 엄청난 성과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차별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컴퓨터 통신언어 바로쓰기' 순회강연 클로즈업

잘못쓰는 통신언어 바로잡는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언어가 넷세대들의 새로운 코드로 등장한 지금, 한글의 훼손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식없이 사용하던 통신언어에 대한 반성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사진은 통신언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부천의 심원중학교 강의실)

"강추(강력추천)가 표준말 아니네"
영어·특수문자 섞어 외계어 방불
학생들 '번거롭지만 바르게 쓸것' 다짐

"어! 강추(강력추천)가 표준말이 아니네?"

지난 6일 '컴퓨터 통신언어 바로 쓰기' 순회강연이 펼쳐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심원중학교. 강의를 지켜보던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럼 강퇴(강제퇴장)도 표준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머하니'가 왜 틀려요?"

오늘날 일상 생활화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통신언어들. 학자들 사이에서는 국어파괴니 새로운 언어 영역의 탄생이니 하며 의견들도 분분하지만, 오늘의 통신언어를 젊은 네티즌들의 문화코드로 인정하기에는 기성세대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

일상에선 무의미한 언어

따라서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가 지난 5일부터 전국 주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컴퓨터 통신언어 바로 쓰기' 순회강연은 '잘못 쓰이는 언어와 잘못 알고 있는 언어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기성세대들의 마음이다.

"물론 컴퓨터 통신언어도 사회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통신언어는 지정된 공간 즉 컴퓨터상에서 존재할 때 의미를 갖는 것이지 통신을 떠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면 무의미한 언어가 되는 것이지요."

통신언어를 연구하다 오히려 그 재미에 푹 빠진 적도 있었다는 한글학회 박동근 박사. 네티즌들의 기발한 착상을 보고 한편으로 통신언어를 새로운 언어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언어는 우리 겨레의 얼이자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삶의 중심축이기에 언어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재미삼아 쓰던 말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를 듣고서야 잘못된 통신언어가 언어 파괴는 물론 표준어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학년 이범희 군. 이번 특강을 계기로 좀 귀찮고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최고의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글'을 앞으로는 신중하고 올바르게 쓸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러한 한글파괴 현상은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보다 중학교 저학년, 초등학생들 사이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올바른 표기도 모른 채 '→しㅐ フト(내가)'와 같은 외계어부터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동생은 진짜 심해요. 아빠가 동생이 쓴 생일축하 편지를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우리말 소중함 깨우쳐야

이에 대해 이수재 교사는 "과거에는 빠른 입력과 친근감 표시를 위해 '방가' '추카' 등 일부 변형된 형태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한글자모·영어·한자·일본어·특수문자 등을 조합한 '외계어'의 등장 앞에서 할말을 잊고 맙니다. 한번은 1학년 학생이 수행평가지에 '즐거운'을 '즐'로 써낸 적도 있고, 심지어는 '八°ㅏFБGЙ♡여'(사랑해요)라고 써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언어의 소중함을 깨우쳤으면 합니다"라고 말한다.

교내 방송시설을 통해 박동근 박사의 강의를 시청하던 1학년 교실. 교사와 학생들간 흥미로운 놀이가 벌어졌다.

'ㄴ너 집ⓔya?¿' 'ⓡ려뉴九 쉬풔숴여. 어뤠 因○○中 쉭⑨들악'

"이게 뭐야?"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아이참, 그건요…."

아이들에 관해서 라면 평소 웬만한 것쯤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박정준 교사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선생님, 그럼 이건 아세요? '건뒈 2뿡YO. 八°ㅏFБGЙ♡여'

계속 이어지는 아이들의 공세에 박 교사는 그만 두 손을 들었다.

"틈나는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신언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순회강연을 좀더 확대해 정규 수업과정에 통신언어를 포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학생들이 표준말과 통신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반면 학생들은 교사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의 도중 자신들이 아는 통신언어가 나오면 환호성을 지른다.

"재미있잖아요. 항상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매우 즐겁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말들을 만들다보면 기분이 우쭐해져요."

'ㄴ너 집ⓔya?¿ (너 집이야?), ⓡ려뉴九 쉬풔숴여. 어뤠 因○○中 쉭⑨들악(알려주고 싶어서요 우리 대△△중 식구들아), 건뒈 2뿡YO 八°ㅏFБGЙ♡여(그런데 예뻐요 사랑해요)'라며 척척 해석까지 해주는 2학년 이준호 군. 자신의 이름이 통신상에서는 '즈너'로 불린다며 으쓱한다.

마구잡이 한글파괴 우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우리들이 쓰는 통신언어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한글을 파괴하다보면 언제 우리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도 들고요. 많은 것은 약속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친구들과 얘기할 때만은 사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르르 몰려나가는 학생들 사이로 짧은 대화 한마디가 들려왔다.

"야, 컴겜 하러가자?"

"컴겜이 뭐냐! 오늘 배웠잖아. 컴퓨터 게임이라고 해야지."

〈채수일기자〉

산불조심, 산과의 약속입니다 11월1일~12월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